

통일 교육과 남북 대학 교류

김 영 수 |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I. 남북 대학 교류, 이제 시작이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교류 및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교육·학술 분야의 다양한 교류 협력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학 차원에서 북한 대학과 자매결연 사업이나 학술교류를 추진하고 북한에 대학을 건립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서는 가 하면, 학과나 총학생회, 동아리 및 개인 차원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먼저 북한 지역에 설립되었다가 분단 이후 남쪽으로 학교를 옮긴 대학들은 평양 및 인근 지역에 캠퍼스나 분교를 설립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방북 문제 등 절차 협의에 착수하고 있다.

또 몇몇 대학은 학술교류 협정 체결과 교수·학생 교류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남북한 언어, 컴퓨터 표준화 방안, 과거사 공동발굴 및 연구, 의학 분야 등 교류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전국 192개 4년제 대학 총장들이 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6월 30일 남북대학 학술교류 추진에 대한 결의를 함으로써 향후 남북 대학간 학술교류의 활성화를 천명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총장들은 남북 대학 학술교류를 기획·조정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남북대학 학술교류협력단'

을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남동공동선언을 계기로 1995년에 추진하다 중단했던 남북 대학총장회의를 재추진, 남북 대학교육의 내용과 방법, 연구 체계의 단일화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총학생회 차원에서는 북한 대학과의 자매결연 사업 추진, 공동 작품전시회 개최, 방북 취재 실시, 북한 대학생에게 편지 보내기 운동, 단군릉 답사 계획 등을 세운 바 있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육 공동연구, 언어 이질화 극복 방안 마련, 교원과 학생 간 학예·체육행사 공동 개최, 교육자료전 상호 개최 등 다양한 남북교류를 추진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1999년부터 교원교류를 추진해 온 전교조도 2000년 초 통일부에 교원교류를 신청해 놓은 가운데 일단 이 문제부터 해결한 뒤 학생간 교류로 범위를 넓혀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교육문제 전반에 대한 자료교환, 공동연구 등을 도모하기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교육인적자원부도 정보화 교육이나 남북한 언어 동질화 등에서 북한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며, 통일 준비를 위한 교육제도 정비와 북한과의 교육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노력과는 달리 아직까지

는 북쪽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우리의 제안을 받아 들이지 않고 있어,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사실 현재는 초기 단계라 남북관계가 안정적인 구도를 구축하지 못하고, 이른바 '상황의 이중성' 속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향방을 예측하기 쉽지 않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전제로 미래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대학교류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일회성 교류나 협력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류 협력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대학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경우 어떤 방향과 목표에서 대학교류 문제를 전개시켜야 하는지? 지금부터 준비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Ⅱ. 대학교류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자

앞으로 예상되는 남북대학간 교류와 관련,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교육·학술 분야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교류와 협력의 목표를 분명히 인식하고 설정해 놓지 않으면 교류 협력이 일회성 내지는 이벤트성 행사 수준을 넘기 힘들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과제는 남북한 교육체제의 완전한 통합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호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통의 관심사를 개발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상호간 이질성을 확인하고 서로 다름을 수용할 수 있는 아량과 인내심을 키우는 데 교류 협력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의 동질성 요소를 키우고 이질적인 요소를 줄여 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

즉, 그 동안 상호 적대적인 체제 아래 굳혀 온 교육체제와 교육내용을 개선하여 남북한 사이의 '상

극성' (相剋性)을 최소화하는 대신 '상보성' (相補性)을 최대화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대학간 교육·학술 분야의 교류협력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신중하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

둘째, 이 분야에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동안 진행되어 온 남북 접촉 및 교류 사례를 자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새로운 환경 속에서 확대·개선시켜 나간다는 자세로 교류 협력의 장을 열어 나가야 한다.

그 동안 역사, 고고학, 언어, 과학기술, 의학, 컴퓨터 부문에서의 접촉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한 접촉 사례도 예상보다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민감하고 예민한 정치적인 영역이라고 해서 애써 피해 갈 필요 없이, 현재 상태에서 교류 협력의 '우선 분야'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이를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즉, 현실적 여건과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북한측의 기대 반응을 예상하여 상대방이 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성을 느끼는 분야부터 교류와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

셋째, 교류 협력의 우선 분야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교육·학술 분야의 실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북한의 교육 여건과 환경과 관련된 실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교육기관과 시설 현황, 교육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체계, 교육인력 현황 등 교육과 관련된 'hardware', 'software', 'manware'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심의 '남한중심적 시각'에서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무리하게 제기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제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분야만큼은 엄격한 상호주의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서로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른 공동



체간의 교류 협력을 위해서는 한쪽이 먼저 양보하지 않고서는 교류와 협력이 어렵다는 점에서 너무 엄격한 상호주의에 입각해 교류할 필요가 없다. 즉, 지금까지 거의 단절 상태로 지내 온 북한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데 첫째 의의를 두고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시도해야 한다.

넷째,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효과에 중점을 두고 남북한 교육·학술 분야의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즉 상황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남북간 연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타 분야의 교류 협력과 긴밀한 연계를 유지해야 하며, 특히 '남남 대화'에 토대를 둔 교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적 합의에 기반을 두지 않은 무리한 시도나 시혜 일방적인 지원이 교류 협력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다섯째, 앞으로의 활발한 교류 및 협력을 위해서는 대북 접촉에 필요한 접촉 절차, 협상 과정, 합의 이행, 실천사항 등에 대한 일정한 공통 규칙과 규범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학술 분야의 경쟁적인 대북 접촉으로 인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줄이기 위

해 일정 기간 이 부문의 교류 협력을 조정, 관리하는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

예컨대, 남북교류와 협력이 대폭 늘어날 것을 예상해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통일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환경부, 법무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남북 교류 협력과 관련된 업무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원칙이 분명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전개될 교육 관련 행동 주체들의 다양한 교류 협력 움직임이 이벤트 성격에 치우친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결국 비생산적이고 비체계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소지가 높다.

더욱이 대학간 교류라는 분야는 각각의 체제 특성이 강하게 베어 있는 영역이라 쉽게 과거의 타성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특징을 갖고 있다. 즉,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제안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오랜 시간이 걸려야

조금씩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폐쇄 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특성을 감안해 본다면, 북한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접근하거나, '남한중심적 시각'에 입각해서 추진해서는 성취할 수 없는 과제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경제력 회복을 목표로 하는 남북경협이 일차적으로 진행된 뒤, 그것으로 인해 남북 상호간 신뢰 구조가 구축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간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가서야 위에서 언급한 대학간 교류 문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첫째,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 다름을 수용하는 수준에서 교류 협력을 모색하며, 둘째, 이 분야에서의 공통된 관심사를 타진하고 개발하는 차원에 국한시키며, 셋째, 남북한 교육체제의 상극성을 줄이고 상보성을 키워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현 단계 대학간 교류 협력 방안의 기본틀이라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교육 관계 문헌·자료 및 정보의 교환, 인적교류 실시보다는 기존의 학술 접촉 및 교류 지속, 교육 관계 국제 기구와의 공동 참여, 남북 교육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체결 등이 보다 실천 가능한 과제라고 본다.

Ⅲ. 통일교육 차원에서 대학교육을 풀어가자

지난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의 평화문제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전쟁의 공포로부터 한민족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 이질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남북한 주민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 동안 남북은 '함께 사는 통일' 보다는 '이기는 통일'에 주력해 왔다. '사람의 통일' 보다는 '제도의 통일'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그 결과 '마음의 통일' 보다는 '국토의 통일'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 이유로 교육도 이데올로기 교육에 치우친 감이 적지 않았다. 상대방의 문제점, 나쁜 점, 사악한 점을 들춰내어 이를 배제하고 멸시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해 왔다. 따라서 남북의 평화는 우리 편이 다른 편을 굴복시키고 다른 편이 붕괴되어야만 가능해 지는 것으로 가르쳐 왔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여 왔다. 체제 특성상 오히려 더 강한 논리와 설득력으로 북한 주민들을 사회화시켜왔다.

북한을 통일 이후 함께 해야 할 동반자라는 시각에서 조명하기 시작한 것도 얼마 전부터다. 그 동안은 주로 흡수 통일의 입장에서 통일 이후 양상을 상상하며 그에 맞는 방안을 제시해 왔다. 그래서 남북의 평화공존 상태에 대한 예측이 매우 취약하며, 남북한 주민이 함께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피상적으로만 느끼고 있는 처지이다.

이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남북한 평화문제와 통일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과거의 시각과 갖고 있던 사고 구조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대응 방안도 마련하기 어려운 새로운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새로운 국면과 경험에 대한 준비 작업이다. 특히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남북문제'를 새롭게 생각하고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통일 사회의 미래상을 그려 갈 사회구성원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비중 있게 다뤄 주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런 문제 의식에서 보면, 우선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가르치고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은 전쟁을 추상화시켜 이해하는 경향이 높다. 동족상잔인 한국전쟁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전쟁의 폐해와 참화를 자신의 삶과 연관지어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평화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북의 평화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기 위해서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남북의 평화와 남북이 함께 사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에 갖고 있던 북한에 대한 선입견을 불식하고, 북한의 언어, 사회, 제도의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 북한 사회와 문화가 우리의 것과 얼마나 다른지 또 비슷한지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주민이 함께 살게 될 때 야기될 갈등과 문제점을 미리 예상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북한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익히는 것도 필요하다. 그 동안 분단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친숙함이 너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자연환경과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에 대해 친숙하게 되면 그만큼 관심을 갖게 되고, 점차 북한 실체와 북한 주민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다. 휴전선으로 인해 차단되었던 '북방적 사고'를 교육과정을 통해 자극하고 배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남북의 미래상과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해외동포 문제'이다.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논할 때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것만 생각하지, 식민 통치와 분단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이 땅을 등져야 했던 같은 민족의 애환과 고통을 함께 생각하는 데 익숙하지 못하다. 따라서 수백만 명의 해외 동포가 생

기게 된 역사적 과정을 모르고 있고, 그들이 타민족에 의해 차별 받고, 우리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면면을 잘 모르고 있다. 그 결과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과 우리 중심의 배타성이 어느 정도인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앞으로 전개될 남북간 대학교류는 통일교육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학교류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남북대학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를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왜 평화공존을 유지하면서 통일을 해야 하는지를 실감할 수 있고, 통일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남북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음을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대학교류의 목표는 보다 분명해진다. 이 분야의 교류 협력의 일차적 목표는 남북한의 동질성 확대를 위한 것이다. 동시에 상호간 이질성을 확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서로 다름을 수용할 수 있는 아량과 인내심을 키우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특히 남북한간의 교류가 현재와 같이 전면적으로 차단된 상태에서 통일을 맞을 경우, 남북한 주민들의 이질성으로 인해 통일의 부작용 및 후유증은 매우 심각한 양상을 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의 대학교류를 통한 통일 준비 작업은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 온 남북한 학생들이 통일된 새로운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며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기에 대학교류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현재 대학생들은 북한을 잘 모른다. 더욱이 북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또래의 대학생들이 어떤 생활을 하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전혀 모르



고 있다. 그저 우리들보다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것으로만 인지하고 있다.

그나마 정규교육과 매스미디어를 통해 북한 체제의 특성에 대해서는 어렵듯이 이해하고 있을지라도, 북한 체제가 움직이고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데는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번도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기회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초래되는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현재 북한을 탈출해 남쪽 사회에 살고 있는 이른바 '북한 이탈 주민'들이 1,500여 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인식도 매우 어설픈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들에 대한 동정적이고 우호적인 감정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들과 직

접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부딪치게 되면 매우 이해 타산적이고 경쟁의식 속에서 평가하고 있다.

얼마 전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이탈 주민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 수능시험을 볼 경우, 가령 5 내지 10% 정도의 가산점을 주는 것이 어떠한 질문에 대해 고등학교 학생들의 75% 이상이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답한 결과를 얻은 적이 있다. 또 대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입사 시험에서 북한 출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어떠한 질문에 80%가 넘는 학생들이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답한 적이 있다. 심지어는 북한 출신은 북한으로 가서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얻으라는 의견도 속출하였다.

남북 관계가 정상회담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이런 추세는 좀처럼 완화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앞으로 북한 출신과 결혼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정상회담 이전에는 약 60% 이상이 그럴 수 있다라고 답했는데 비해, 정상회담 이후에는 긍정적인 대답이 30%도 안 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사회를 예전보다 더 자세히 알게 되고 보니, 도저히 그 사람들과 결혼한다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더욱이 결혼할 수 있다라고 답한 학생들도 이왕이면 북쪽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못 나가던 사람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설문 결과는 남북 관계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남북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함을 미리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국 차원의 남북 관계는 개선된다고 해서 남북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개개인의 마음까지 저절로 나아진다고 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통일과 관련해 주로 영토의 통일과 제도의 통일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람의 통일', '마음의 통일'을 동시에 지향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던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 좀처럼 성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발견하게 된다.

분단 56년 동안 너무도 서로를 모르고 살아왔고, 감정적으로 통일을 회구한다 해 놓고도 실제 현실적인 영역에서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살아왔다. 같은 핏줄이고 같은 겨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북한인', '남한인'이라 불려도 될 정도로 생활 양식, 사고 방식 등이 동떨어진 이질화 상태를 초래하고 있다. 그 결과 소원은 항상 통일이면서도, 실

제 삶은 분단 구조에 익숙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바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활발한 남북간 대학교류가 필요하고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남북이 하나 되기 이전에 학생들간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삶을 확인하고, 서로 다른 점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지금처럼 서로 떨어져 살아가면서 각자의 시각에서 남북이 하나됨을 생각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통일을 이룩하기 어렵다.

남북간 대학교류를 통해 풀어나야 할 중요한 명제는 분명하다. 통일은 왜 해야 하며, 통일이란 무엇을 하나로 만들지는 것인지? 통일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 것이며 또한 통일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은 무엇인지? 누가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은 과연 가능한지? 통일을 추진할 만한 준비 태세는 갖추어져 있는지? 통일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준비가 필요한지? 어떤 순서를 따라 통일 노력을 펴나가는 것이 현명한지 등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대학교류는 결국 사회 문화 통합이란 과제로 귀결된다. 이는 진정한 통일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면서, 동시에 '마음의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다. 이 점에 항상 유념하면서 대학교류 준비에 임해야 한다. **■**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육사 교수, 제주대 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제 9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한국정치학회·한국국제정치학회·북한연구학회 상임이사로 활동중이다. 저서로는 「김정일 시대의 북한」, 「남북한관계론」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전망」,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방안」 외 다수가 있다.